

VII. 北韓 動靜

武裝 間諜 事件과 韓·美의 對北 政策

- (北韓의 意圖) 북한은 무장 간첩 사건과 대남 보복 위협을 통한 한반도 긴장 고조를 대미 직접 접촉으로 연결시켜 보고자 하고 있음
- (韓國의 對應) 현재 정부는 총력 안보 자세 강화, 대북 정책 재검토(남북 경협 유보 및 경수로 사업 속도 조절 등), 유엔 안보리 상정 등 강력한 대응 조치를 모색하고 있음
- (美國의 對應) 미국은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희망하면서, 기존의 대북 유화 정책 위에서 신중한 대응 자세를 보여주고 있음
- (評價) 한·미간의 입장 차이가 지속될 경우에 외교적 수단을 통한 국제적 대북 제재 조치는 간단치 않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 역시 일정한 한계를 지닐 것으로 판단됨

북한은 긴장 고조를 대미 직접 접촉으로 연결시키고자 함

○ 북한은 무장 간첩 침투 사건과 관련, 오히려 對南 보복 위협을 통해 긴장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는 한편, 긴장 고조를 빌미로 미국에 대해 「평화 협정을 위한 잠정 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음

- 대남 보복 위협과 대미 불간여 요청에서 보듯, 북한은 한미 이간책을 바탕으로 대남 강경책과 대미 유화책을 병행하고 있음
- 북한은 남북 긴장 고조를, 11월 대선을 앞두고 긴장을 원치 않는 미국과의 직접 접촉(협상)으로 연결시켜 보고자 하고 있음
- 북한의 실제적 보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보복의 수준과 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 미국의 개입이나 국제적 고립 심화, 국제 사회의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 철회 등과 같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보복이나 도발은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정부는 대북 정책의 전면 재검토 등 강력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정부는 북한의 무장 간첩 사건과 보복 위협에 대해 총력 안보 태세 강화와 대북 정책 재검토, 유엔 안보리 상정 등 강력한 대응 조치를 모색하고 있음

- 정부는 북한의 보복 위협에 대해, 도발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음
- 정부는 북한의 대남 적화 야욕을 억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모든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
 - 북한의 명확한 태도 변화가 있을 때까지 시혜적이거나 교섭에 의하지 않은 대북 지원은 중단할 방침
- 정부는 남북 경협 사업 및 사업자 승인과 기업인 방북 승인 불허, 대우 직원의 추가 방북 승인 유보, 나진·선봉 지역 내 한국 전용 공단과 무역관 개설 추진 유보 등 단계적인 대북 제재 조치에 착수함
 - 또 정부는 제7차 부지 조사단 대북 파견 연기, 「부지 및 서비스 이용 후속 의정서」 서명 연기 등 대북 경수로 사업의 속도 조절을 고려하고 있음

미국은 우리와 달리, 대북 유화 정책의 틀 내에서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음

○ 우리의 강력한 대응과는 달리, 미국은 신중한 대응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 이번 사태에 대한 양국의 대응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 미국은 북한의 도발뿐만 아니라 한국의 과잉 대응에 대해서도 우려하면서, 이번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음
 - 미국은 북한의 보복 위협에 대해 실질적인 도발 위협은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미국은 11월 대선과 관련, 한반도의 안정을 희망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존의 대북 유화 정책의 틀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입장
- 미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 군사정전위원회 틀 안에서 평화적 수단을 통한 해결을 촉구하면서, 특별한 군사적·외교적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미국은 틴스피리트 훈련 재개와 같은 우리측의 요구에 대해, 북한 핵동결의 토대인 제네바 합의를 뒤흔들 수 있는 수단의 사용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 또 미국은 우리측의 대북 감시 태세(워치콘) 격상 요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 피력

한·미간의 입장 차이가 지속될 경우, 우리의 대북 제재 조치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한·미간의 입장 차이가 지속될 경우에 외교적 수단을 통한 국제적 대북 제재 조치는 그리 간단치 않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 역시 일정한 한계를 지닐 것으로 판단됨

- 정부는 9월 19일에 이번 사건의 성격을 '무력 도발'로 규정하였으나, 9월 29일에는 '무력 도발을 노린 전투 정찰'로 한발 후퇴하였음
- 사건 초기 미국은 '무력 도발'이라는 우리의 성격 규정에 동의하지 않았음
- 최근 정부는 한미 공조 유지를 위해, 4자 회담 추진과 정수로 사업 등 대북 정책의 기본틀은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어,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은 여전히 애매보호한 상태임
- 정부의 대북 정책 재검토 방침은 4자 회담을 포함하여 제네바 합의에 근거한 미국의 대북 연착륙 정책과 조화되지 않는 측면도 있음
- 미국은 이번 사건을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으면서, 4자 회담과 연락사무소 설치, 제네바 합의의 이행 통과와 같은 기존의 대북 정책을 계속 추구해 나가는 한편, 그 여건 조성에 저촉되는 조치의 채택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큼
- 4자 회담을 위한 3자 설명회나 북미 연락 사무소가 설치될 경우, 한반도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임 (이 태 섭)